

“취약계층엔 남아돌아” 마스크괴담 본질은 ‘공급 부족’

서울 시내 취약계층 71만명 추산
독거노인 2만명 안부 주2회 확인
“대부분 기저질환... 관리절저해야”

서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마스크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보건소의 일반 업무 중단으로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고 생활까 봐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배부한 마스크는 224만 여장이다. 시는 지난달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시내 복지시설에 마스크 204만개를 배부한 데 이어 이달 중 마스크 제작 업체 필트가 기부한 20만장을 취약계층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주원(가명·41) 씨는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3시간이 넘게 기다려서 사는데 저소득층은 동 주



지난 2일 오후 방역복을 입은 시민이 서울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민센터에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마스크를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준다고 해도 집에 남아도는 마스크만 몇 박스, 귀찮으니까 갖다 버리라”고 한다고 아는 공무원이 그랬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취약계층에 무료로 지급하는 마스크를 복지수혜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소문에

대해 서울시와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구청에 전달한 마스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며 “현재까지 마스크를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배부량에 따라 다른 데 가장 최근에는 일인당 40매씩을 지원했고 다들 고마워하시면서 마스크를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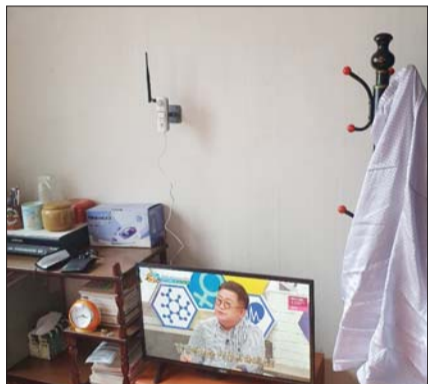
가셨다”며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이웃을 돕고 싶다면 동 주민센터로 마스크를 후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지급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서울 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약 71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들이 마스크가 집에 많다고 안 가져간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 없다”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직접 집에 가져다 드리고 있고 마스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 부족하면 부족했지 공급량이 차고 넘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인생활지원사 2594명을 투입해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2만 9600명의 안부를 주 2회 확인하고 코로나19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중단,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아버지가 보건

소에서 고혈압약을 타다 드시는데 일반 업무가 중단돼 걱정이다”며 “코로나19 사망자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씨는 “동네 내과에서는 협약약이랑 혈액순환제 두 달 치가 약 2만원 정도인데 보건소는 더 싸서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며 “약값 아끼겠다고 보건소가 다시 문 열 때까지 기다릴까 봐 무섭다”며 울상을 지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보건소의 기존 진료 업무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로 운영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시민으로 진료 대상을 확대해 민간병원에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한다.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 공백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보건소 이용자들에게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안내해 드렸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에 걸렸거나 감염병의 의심되는 시민들에 대한 검체채취와 진료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IoT로 40명의 고독사 막았다

서울시, 시내 5000가구에 설치
대부분 안전·안부확인 1423건
2022년까지 1만2500대 예정

#. 체장암 말기, 구안와사 후유증 등 각종 질병으로 기력이 몹시 쇠약했던 최모 어르신은 이웃, 가족 등 사회관계망이 없어 홀로 생활한다.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IoT(사물인터넷) 덕에 고독사 예방은 물론 갑작스런 건강 변화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고 이야기한다.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기기. /서울시

서울시는 독거노인 가구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한 결과 지난해 40건의 사망 가능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5일 밝혔

다. 시는 작년 온도, 습도, 조도 등 환경 데이터를 파악하는 IoT 센서 기기를 시내 독거노인 거주 5000가구에 설치했다. 올해 2500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해 IoT 센서를 활용한 안전·안부

확인 총 1423건 이뤄졌다. 자살 고위험군의 안전·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55건으로 대부분인데 생명을 구한 사례도 40건 있었다. 기기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담당 기관의 상황판과 독거노인 담당 생활지원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된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온도, 습도, 조도 등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생활지원사가 해당 가구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IoT 기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 가구에서는 고독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2022년까지 1만2500대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퇴치 염원 연에 담아 날려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한국연맹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를 염원하는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맹·대리점 조정기관’

첫 변론 기일전 당사자간 합의 유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의 ‘가맹·대리점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 조정 절차에 회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외부조정기관이 조정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한다. 법원이 넘긴 분쟁사건은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 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 대표(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시 분쟁조정협의회는 접수된 분쟁을 60일(동시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합의를 돕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고 평균처리기간도 31일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특히 가맹점주·대리점주 대부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평균처리기간이 짧은 조정을 통해 합의가 진행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본사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많은 소송 중 일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본부와 가맹·대리점주 간 분쟁 예방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빠른 조정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심리상담, 전 직종 노동자로 확대

생계 위협 플랫폼 노동자 집중 관리 방문 아닌 전화상담 통해 불편 덜어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에게 제공해오던 심리상담을 전 직종 노동자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감이나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확대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방문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

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 상담은 방문이 아닌 전화로 진행된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등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상담 희망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상담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든 상담은 무료다. 상담내용은 업무스트레스, 개인사유, 대인관계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배정된 전문상담사는 신청 노동자에게 총 2회 전화로 상담을 실시한다. 향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이후 치유프로그램(1인 최대 10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리 보호와 구직지원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